

朴 “최순실 국정농단 입증 안돼… 세월호 참사 당시 정상근무”

박대통령 현재 답변서 탄핵소추사유 모두 부인

유출 문건 비밀문건에 해당 안돼

뇌물죄는 재판후에 결정돼야

K재단 최씨 사익 추구 인식못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반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측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18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 요지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며 “미르·K재단 사업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피청구인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

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현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선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 없고, 출연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 등에서 자발적 기금모집이라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로 인한 생명권 보장 위반 주장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는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며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최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관해서도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지는 분명하지 않고, 유출된 연설문은 선인적·추상적 내용이 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이날 연석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통 끝에 답변서를 공개한 배경을 설명한 뒤 “8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 변호인 선임계를 현재에 제출하고, 민주당 요구에 따라 민주당이 변호사 5명기량을 추천하면 이 중 2~3명을 대리인단에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새누리당 권성동, 국민의당 김광영, 국민의당 손금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합뉴스

황교안 마이웨이…야권 속만 부글부글

별다른 제재 방안 없어 곤혹 與친박 원내대표 선출에 고민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대정부질문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인사권 행사 등에 대해 심자포화를 쏟아내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특히,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정우택 의원이 당선되면서 여당과도 냉기류가 형성, 당분간 국정협업체 구성 논의가 지연되는 등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탄핵 정국에서 관리자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려 하면서도 정작 국회의와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며 일제히 각을 세웠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황 권한대행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절한 것을 언급하면서 “더는 국

회를 무시하거나 탄핵 마음을 외면하는 불통의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국회를 방문하며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했다”며 “시내버스 정류장에 총리 관용차가 불법 주차해 버스를 지연시킨 일은 ‘황제교안’ 총리의 유명한 일화”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역시 “황 권한대행이 국회의장을 예방하면서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황 권한대행은 극히 일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뿐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황 권한대행은 크게 작각하고 있다. 지금은 광장의 민심을 수용할

때”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황 총리가 야당 회동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의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쥔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친박 지도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상황에서 여당에 친박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것도 고민거리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결과”, “새누리당이 대화의 창구를 건어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여당과 당분간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늦어지고 국정 수습에 참여할 통로가 좁아지면서 탄핵에 앞서 ‘선(先)총리 임명’ 문제를 외면했던 민주당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자료 필요한 현재, 시간 끌고 싶은 청와대…특검은 당혹

박대통령측 수사기록 제출 놓고 신경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 현재와 특검·검찰·청와대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배보은 현재 공보관은 지난 15일 기자들을 만나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기 전에, 또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려면 기록 말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기록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법 위반을 피하면서 자료확보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행 현재법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요청을 접한 특검은 다소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당초 특검은 현재가 법원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노무현 전 대

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에도 현재는 법원을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특검은 특히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지만 탄핵사유로는 명시된 부분의 수사기록을 현재에 넘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차 뇌물죄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특검은 직접 수사기록을 넘기는 대신 법원이나 국회 등을 통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탄핵심판의 검사격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기록사본을 요청한 뒤 이를 현재에 넘기는 방식이다.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들도 현재의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현재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정보를 얻는 기회를 포기하는 대신 탄핵심판 심리를 늦춰 시간을 버는 것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현재의 요청에 이의를 신청하면 현재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탄핵 심리는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현재 휴일 없이 10일 강행군…탄핵심판 속도대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휴일도 잊은 채 기록검토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 9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후 1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강행군 중이다.

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헌철 현재소장과 상당수 헌법연구관 등이 이날 오전 출근해 자료 검토와 법리 분석을 이어갔다. 전날 현재 인근에서 벌어진 제8차 촛불집회와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의 여파로 한층 강화된 경찰의 경계

태세 속에서 현재도 신속한 결정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재판관들과 헌법연구관들은 이날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제출한 답변서를 사안별로 쟁점을 정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또 대통령 측이 16일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6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현재가 검찰과 특별검사에게 ‘최순실 게이트’ 수

사자료를 요청한 것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현재는 이르면 19일 대통령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나 최순실 등의 1심 재판이 본격화되면 서 현재도 이번 주 내로 준비절차기일을 확정하는 등 준비절차 진행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대통령과 국회 측의 준비절차에 대한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구체적인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무안출발 추천 겨울여행!
다낭 · 캄보디아
문의: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 062) 228-1199

캐주얼 ARPF01
초특가 필살기
앙코르왓 4일, 5일
6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12월 31일 ~ 1월 14일 매주 수/토
스카이앙코르항공 (ZA항공)
특식4회(샤브샤브, 김치찌, 버섯김치전골, 쌈밥정식)

캐주얼 AVPF13
[4성급 호텔] 투본강투어
다낭 · 호이안 · 후에 5일
8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12월 30일 ~ 1월 17일 (출발일 상이)
비엠헤항공 (VJ항공)
호이안 투본강 투어(\$30상당), 스넥바구니(\$10상당) 포함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안전보험료, 관광진흥기금기공,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액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여행상품 내용]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른 자유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속이한 시장에서 여행일정에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명자 등록번호 제269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통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에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 여행 유의 ● 여행 자재 ● 필수 권고 ●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